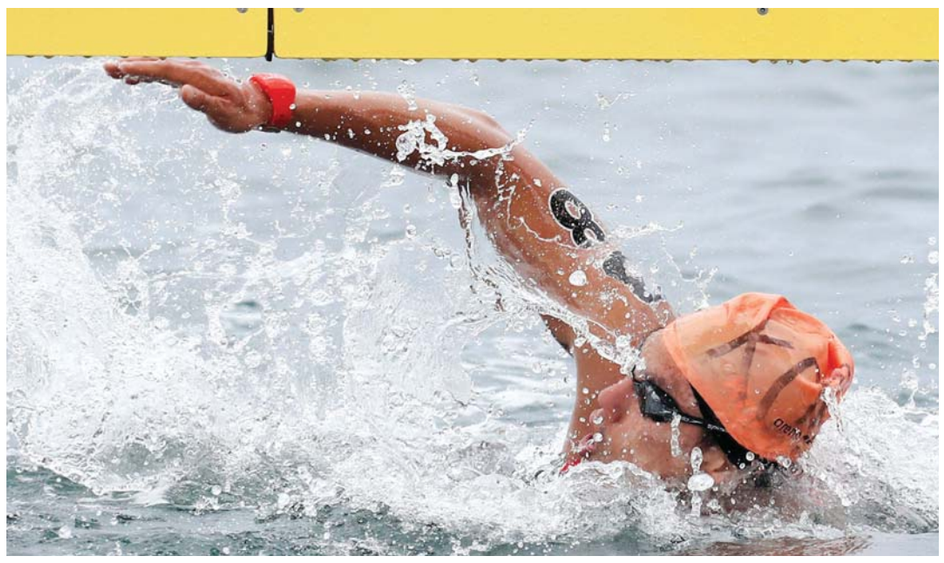
문체부는 지원 외면…수영연맹은 '국제망신' 초래

GWANGJU 2019 | Fina WORLD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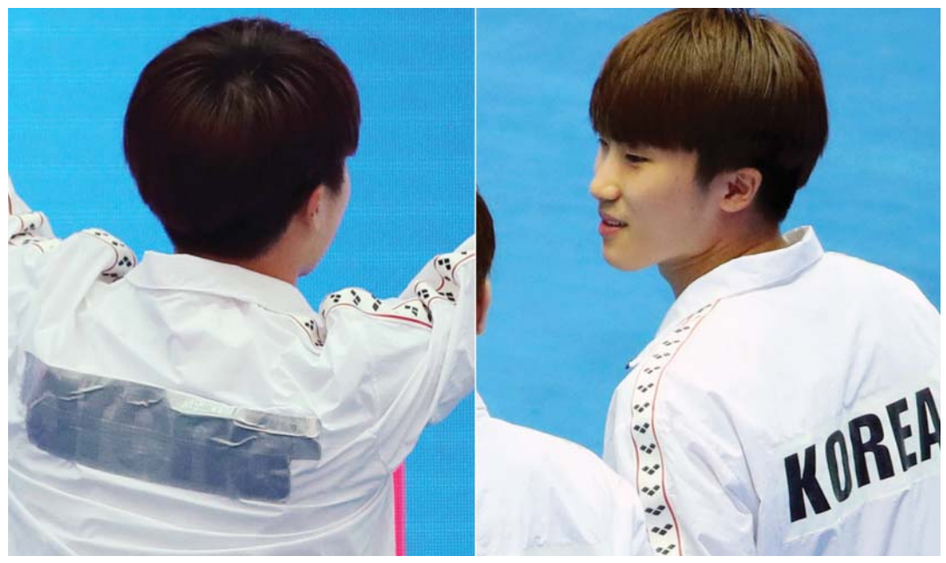
광주세계수영대회 결산

〈5〉 아쉬움 많은 성공대회

박근혜 정부때 쓴 협약서 근거
예산 지원 난색…정권 바뀌고 확보
미숙 행정 '매직펜 수영모' 촌극
北선수단 불참 초반 흥행 어려움



지난 13일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에서 열린 오픈워터수영 남자 5km 경기에서 백승호가 터치패드를 찍고 있다. 백승호는 57분 5초 30의 기록으로 총 60명의 출전 선수 중 48위를 기록했다. 백승호 선수가 매직으로 'KQREA'를 쓴 수영모를 쓰고 역영하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대회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전에서 테이프로 상표를 가린 상의를 입은 우하람이 입장하고 있다(왼쪽).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15일 우하람이 임시방편으로 국가명을 붙인 상의를 입고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 대회로 평가받고는 있지만 북한 선수단 불참과 정부의 예산 지원 외면, 대한수영연맹의 부실한 행정 처리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수영대회가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 대회'로 치러지게 된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철저한 외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로 꼽히는 만큼 정부와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법도 했지만, 정부는 대회 유치에서부터 예산 지원까지 오히려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와 수영대회조직위는 지난해 연말 정부에 230억원의 예산 추가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예산 추가 증액이 어려운 이유로 '광주시가 지난 2017년 수영대회와 관련한 추가 예산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한 협약서'를 내세웠다.

이 협약서에는 '국비를 증액하지 않고, 늘어나는 예산은 광주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협약서를 근거로 추가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광주시와 조직위는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협약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기재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와 방만한 재정 운영, 과도한 예산 증액 요구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훈령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제수영선수권대회를 광주시가 유치한 때는 지난 2013년으로, 기재부의 내부 훈령 개정이 이뤄진 시점보다 3년이 앞선 만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내부 훈령 개정을 통해 광주수영대회를 규제하고 불이익을 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조직위 관계자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가 이미 광주시로 확정됐고, 추진중인 사업인데도 정부가 사후 규정을 정했다"면서 "이미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국제대회인 만큼 '소급 입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광주시는 결국 지난 2017년 추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협약서를 썼고,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 국비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 속에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대회 사업비의 숨통이 터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문체부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승인이 상당기간 늦어져 3월에야 예산이 교부된데다, 해당 예산도 자치단체 경상보조 성격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어서 집행은 광주시가, 운영은 조직위가 따로따로 맡아야 했다. 대회를 3개월 앞두고 뒤늦게라도 2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돼 대회 운영에 다행히 큰 지장이 없었지만, 대회 유치에서부터 개막까지 정부의 무관심은 오래도록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대회 개막 전부터 끝날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회 붐업을 위해 청와대 비서진을 현장에 보내 응원에 나서는 등 정부 부처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나섬으로써 광주대회는 막바지 흥행이 가능했다.

이번 대회기간 중 대한수영연맹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숙한 행정으로 국가대표가 'KOREA'가 써지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출전하고, 매직펜으로 'KOREA'라고 써넣은 수영모를 쓰고 급하게 경기에 출전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대한수영연맹의 잘못인데도 일부에서는 조직위 운영 문제로 확대되는 오해가 빚어지면서 광주시와 조직위가 난감해하기도 했다.

북한 선수단 불참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광주시와 조직위, 국제수영연맹(FINA)의 수 차례 참가 요청과 선수 엔트리 마감 이후에도 참가가 가능하다는 배려를 했음에도 북한 선수단이 끝내 불참해 대회 초반 '흥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인 만큼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다면, 사실상 역대 최고의 '성공 대회'로 기록됐을 것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총선 신인 입지자 봇물…민주, 광주·전남 권리당원 폭발적 증가

시당 5만 5000명·도당 6만명 넘을 듯
접수 마지막날 광주만 1만여장 접수
신인 가산점에 출마 희망 입지자 줄이어

광주·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접수 인원이 각각 5만5000여명, 6만여명에 달하는 등 총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민주당 총선룰에 따라 신인들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권리당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광주 동남갑·목포 등 출마예정자들이 몰린 지역구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지역구에서는 총선 경쟁도 덩달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무분별한 '입당원서 밀어넣기'가 여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허수'도 상당히 걸러지고 있어 정확한 권리당원 수는 오는 15일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날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한 결과 광주시당은 5만 5000여명, 전남도당은 6만여명이 가입 서류를 냈다. 내년 총선 당 경선에서 투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입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광주지역에서 1만여장의 권리당원 입당원서가 접수됐다.

권리당원 모집이 당내 경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지역의 민주당원 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4만 5000여명을 돌파했고, 전남지역 민주당 권리당원도 6만명을 넘어서면서 내년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경선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해 권리당원의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권리당원은 입당 후 이날부터 경선이 치러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사람만 권리당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광주·전남 지역구 18곳 가운데 현역 의원이 광주 1명, 전남 2명에 불과해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데다 신인 가점이 커져 총선 입지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최대 20%의 가점을 받는 신인들의 출마 준비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광주시당은 앞서 적발된 광산구갑·을지역의 온라인 당원 불법 모집과 관련해 해당 당원에게 '해당 지역 활동 확인서' 제출을 요구해 불·탈법 권리 당원모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선난·한일갈등에 개각 폭 줄고 시기 늦어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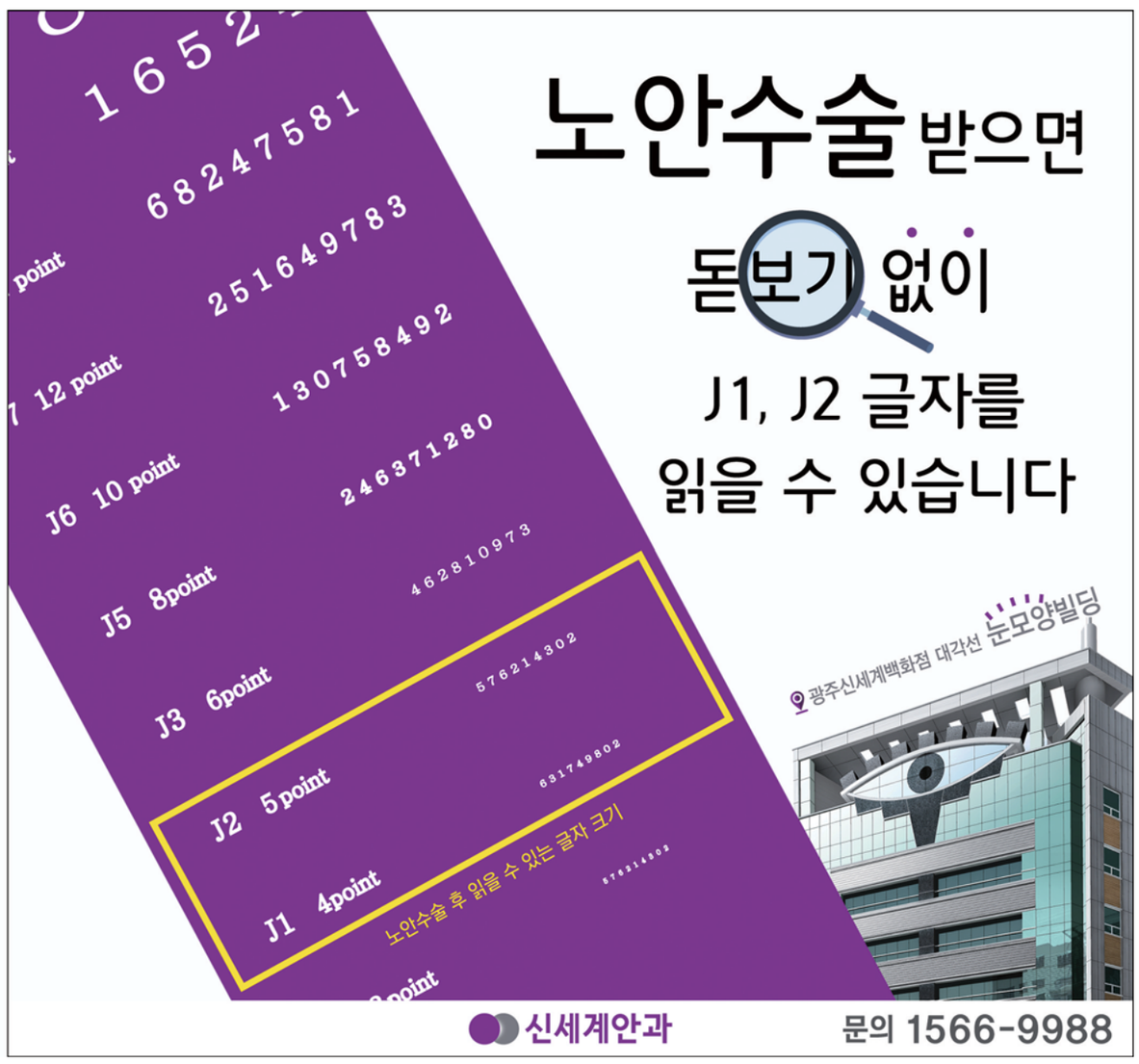
장관 3명 교체 거론 '중폭 개각' 전망

이달 단행되는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후임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각 시기도 당초 5~6일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보다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에서 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유임설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최근 발탁 가능성이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논문표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서도 유임설이 번지고 있다. 적절한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관 교체는 박상기 법무·이개호 농림축산식품·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3석만 이뤄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을 합쳐도 6~7자리 '중폭개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역시 개각에 영향을 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각 부처가 질서정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처 수장들을 대폭 교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개각 시기 역시 지연될 수 있다. 당장 2일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면 대책 마련이 우선이 되면서 개각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음 주 개각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발(發) 변수로 인해 개각이 늦춰지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